

# 여야, 연간 60억 특활비 폐지 '가닥'

### 16일 제도개선 방안 발표 "올해 특활비도 안 받을 것"

여야 원내대표들은 13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국회 특활비는 60억원 규모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불러 이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 조율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여야간에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걸로 합의를 했다"며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개선·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홍 원내대표와 저는 특활비 완전 폐지 합의를 이뤄냈다"며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리정돈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 개혁의 시금석이 돼 버린 특활비 문제에 대해 (1,2당 원내대표가) 결단해줘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국가정보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 이르러 전반기 전반기 제도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호응했다.

문 의장은 "의정사에 남을 쾌거다.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을 어떻게 완벽한 제도로 마무리 짓는가 역할이 (제게 있다). 교섭단체, 당들의 합의 이상의 국회 차원의 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가져서 사무총장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부터)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8월 국회 법안 등 현안을 논의하기 앞서 손을 잡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특활비 폐지는 교섭단체간 국회 차원에서 완전 합의 이뤄냈다"며 "특활비 폐지에 따른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은 의장에 일임했다. 아마 이번주 목요일(16일) 국회 차원에서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을 국민들에게 밝힐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활비 폐지하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런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교섭단체간 의견을 주지 않았다"며 "교섭단체간에는 국회 차원에서 특활비 폐지는 완전한 합의를 이뤄냈다. 앞으로 어떤 경우는 특활비를 지급 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피감기관 해외출장명단 공개" 등에 대해서는 "국회 활동심사자문위원회가 오늘 공식적으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국회에서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제도

적 장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의원의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완전한 시스템으로 확립될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부터 특활비 예산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안했다. 일단 우리는 수령도 안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단 회동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내년 예산 폐지는 물론 올해 7월부터 미수령 중에 있는 특활비 역시 이후에도 받지 않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올해 남은 기간 특활비도 수령하지 않기로 한 이상 정기국회 때 쓰던 각종 지원비는 전액 삭감하고 회의, 간담회, 워크숍 등에 한해 투명하게 증빙하는 기존 업무추진비만으로 건축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김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발표한 것은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라며 "의정단체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사용하는 특활비는 문 의장이 논의 주도해서 1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국회 특활비는 교섭단체와 의정단체, 상임위가 각각 3분의 1씩 사용한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특활비 외 선거제도 개혁 등 현안 논의 여부'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전혀 (안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활비 폐지와 관련해 "우리당이 앞서서 발표했고 일관되게 입장을 견지해 나가면서 두당을 견인해 나간 것"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한편, 여야가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의원 산하에 두기로 한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는 오는 16일 첫 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 "김경수 지사 대상 백색테러 엄중처벌"

### 홍영표, 어익범 특검에 실체적 진실 규명 당부

홍영표(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허익범 특검을 향해 "남은 기간만이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해달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루킹의 거짓말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며 "지난주에는 김경수 경남지사와의 대질 신문에서 그동안 진술을 번복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은 드루킹과 대질신문을 통해 큰 거 한 방 나올 것처럼 언론에 흘렸지만 드루킹의 오라가 거짓말만 확인되고 있다"며 "그동안 특검이 언론에 흘린 것 중 어떤 게 또 거짓으로 드러날지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이어 "드루킹사건은 애초 특검 사안도 아니었지만, 정치적인 논란을 없애기 위해 김

지사가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밝히면서 시작했다"며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진실을 밝혀내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에 대한 백색 테러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김 지사 소환 당시 신변의 위협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특검과 경찰은 왜 적절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호 안전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 김관영 의원, 이동고충상담실 운영 호응

### 매주 토요일 군산 전 지역 순회 애로사항 청취·소통 만전

김관영(사진)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전북 군산)은 매주 토요일 오전 군산 전 지역을 순회하는 '이동고충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나운동 지역사무실에서 진행되는 '민원인의 날'은 기존 그대로 운영한다.



김관영 의원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여러 이유로 지역 사무소까지 찾아오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찾아가 듣고, 소통하고자 매주 토요일 오전, 군산 전 지역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고충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전면 폐지 촉구

### 정의당 전북도당 주장

전북도의회와 정읍시의회 등 도내 일부 의회가 폐지한 재량사업비를 부활하려 하자 정의당이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13일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동료 의원 여러 명이 재량

사업비 비리로 대거 처벌을 받아 폐지를 천명했으나 최근 이를 슬그머니 되살리려 하고 있다"며 "후안무치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재량사업비가 소소한 지역 사업들을 해결하는 수단일 수 있지만, 이미 비리의 온상"으로 판명 난 만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 文대통령, 16일 5당 원내대표 靑 초청 오찬

### 靑 "임시국회·정기국회 앞두고 경제 법안·한반도 평화정착 협력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한병도 정부수석비서관은 1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는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수석은 "이번 회담은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회의와의 협치를 보다 강

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 경제 현안과 법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은 지난 3월 이후 5개월 만에

다. 당시 5당 대표 초청으로 진행됐던 회담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각각 참석했다.

이번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원 민경당 원내

대표, 윤순하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각각 참석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논의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의 재거론 가능성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단 서로 간의 그런 정치적 대립 문제도 많아서 진행이 안됐다"면서 "저희들은 다시 공론화를 제기하고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협치 내각'에 대해서 다뤄질 가능성에 대해 이 고위 관계자는 "내용이 진전된 게 없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는 그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회의적으로 전망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